

##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김혜자

(서울시립대학교)

박지영

(서울시립대학교)

고난난

(서울시립대학교)

진나연

(서울시립대학교)

김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농어촌 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빈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빈곤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빈곤의 범위를 확대한 다차원적 빈곤(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지수 활용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빈곤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1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을 횡단면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및 고용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빈곤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별로는 여성, 노인계층,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차원에서는 2011년 주거빈곤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차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농어촌의 빈곤이 높아져 가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도시의 소득이 농어촌의 소득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커지면서 농어촌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차원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고용,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에 비해 소득차원인 중위소득과 순자산의 차원에서 빈곤경험이 높았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측면에서 빈곤지속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영역별로 도농간 빈곤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다차원적 빈곤, 농어촌빈곤, 도농 비교

\* 교신저자: 김정은, 서울시립대학교(lydiasilver@gmail.com)

■ 투고일: 2013.7.2    ■ 수정일: 2013.11.29    ■ 게재확정일: 2013.12.16

## I. 문제제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7%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파악한 농어촌의 빈곤이 도시지역에 비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박대식과 마상진(2012)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외에 고용·교육·건강·사회참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농어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점은 소득이외에 사회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농어촌이 도시지역과 격차를 보이는 것은 경제·사회 및 환경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구성의 차이와 농어촌의 인구고령화가 그 대표적인 요인이며,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소득감소, 자가 중심의 주거형태로 인한 주택의 노후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가정해체로 인한 조손가족 증가 등 여러 측면에 걸쳐 농어촌 빈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정확한 빈곤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득중심의 빈곤개념을 활용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빈곤분야에 있어 소득중심의 빈곤측정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빈곤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는 다차원적인 빈곤 측정을 통해 소득중심의 빈곤측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빈곤층에 대한 정밀하고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대두되었다(서병수, 2007; 이성민·이수철, 2010; 최균·서병수, 2006; 최균 외, 2011). 기존 화폐중심의 빈곤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빈곤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포괄적인 생활세계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 다만, 빈곤지수를 측정함에 있어 어떠한 차원을 선정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차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이론적, 실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빈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빈곤은 시간축을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특징으로써, 고령화의 진전, 다문화 가족의 증가, 청장년의 도시로의 이동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개념만을 가지고 농어촌의 빈곤을 분석한다면 실제 농어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 문제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농어촌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빈곤문제를 분석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의 분명한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박준기 외, 2005; 이은우, 2007; 김영주, 2008; 강성호·최옥금, 2011, 김태완 외,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제 관점 중심의 빈곤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현황 분석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빈곤의 범위를 확대한 다차원적 빈곤지수 활용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빈곤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빈곤개념을 5개 주요 차원으로 재설정하고 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횡단 및 종단분석을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소득 및 지출 중심의 농어촌 빈곤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촌지역의 빈곤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해 개관하며,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차원적 빈곤의 차원들의 빈곤선과 분석 자료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의 분석 결과를 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한 도·농간의 빈곤격차와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

빈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인 박탈이나 배제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로 Amartya Sen을 들 수 있다. Sen에 있어 가능성이란 자신의 운명을 정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성취하는 실질적 기회이므로 자유(최균·서병수, 2006)이며, 이런 가능성의 기본적 실패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빈곤을 인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결핍으로 인식하므로, 빈곤을 측정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지금까지의 경제적 접근과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빈곤을 다차원적인 실현능력의 결핍으로 이해하려는 Sen의 문제의식

에 동조하여 결핍 정도를 측정하려는 후속연구들이 뒤따랐으며(Finnis, 1980; Doyal & Gough, 1991), Alkire(2002)는 Doyal & Gough의 기본욕구 일람표가 측정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서병수(2007)는 기본욕구 일람표 등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화폐적 지표(경제적 측면)와 비화폐적 지표(비경제적 측면)를 구분하고, 비화폐적 지표를 개인적, 사회적 관계, 구조적 실현능력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는 노동패널(1999~2003)자료를 퍼지집합이론으로 분석하여, 현저한 빈곤율은 조사 기간 중 평균 26.3%에 이르고, 잠재적 빈곤율은 51.2%에 이르며, 빈곤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1~2년 내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비화폐적 결핍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머무는 성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분석을 넘어서 인간의 총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박탈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빈곤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결핍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폐적 결핍과 비화폐적 결핍의 교집합과 합집합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현저한 빈곤(교집합)과 잠재적 빈곤(합집합) 등을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경숙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복합적 수준의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선정하였다. 박경숙(2008: 117)은 위의 9개 측면에 대해 각각 박탈의 수준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측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 교육, 건강, 노동, 사회관계, 자아의식 사이에는 강한 상관 순환적 관계가 존재했으며, 이를 박탈의 그물망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반면, 가족과 복지의 측면은 경제적 측면의 결핍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박경숙은 경제, 교육, 노동, 자아 측면에서 강하게 직조화된 박탈의 그물을 지적하면서, 빈곤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점을 논증하고 있으며, 가족과 복지 효과가 낮은 점을 통해,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유대는 다른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복지 효과가 낮은 점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을 더하고 있다.

또한 김경혜(2010)는 서울의 빈곤 실태조사를 위한 SDI정책리포트의 보고에서, 전통적인 단순한 소득의 부족을 빈곤으로 간주하는 '물질적인 부족'에서 사회·문화적 차원

을 포함하는 '상대적 결핍'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60~197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절대빈곤의 완화로 오히려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신빈곤문제는 소득빈곤의 해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상대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개념까지 확대된 복지결핍의 개념으로의 확대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52.9%가 2개 이상 생활차원-교육(32.2%), 건강(31.1%)차원에서 30%가 넘는 결핍률을 보이고, 주거(27.4%), 고용(27.1%) 등 3가지 이상 다차원적 결핍가구는 25.1%이다.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 18.4%보다 높은 것으로, 비소득적 차원에서 결핍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도 1.6개의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노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충족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서울시 복지정책은 실질적인 복지결핍 수준을 반영한 보편적 사회서비스형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빈곤에 이르는 과정이나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분석, 선정된 각 차원별 빈곤간의 상관관계, 상호영향성, 경제적 중심의 빈곤분석에 비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해석 가능하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다차원적 접근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사회적 배제에 관련된 연구도 넓은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빈곤연구에 속한다. 빈곤의 양상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진행된다는 연구(Atkinson & Davoudi, 2009; 박병현·최선미, 2001; 국가인권위원회, 2004; Alkire & Foster, 2011a, 2011b; Ravallion, 2011)가 학계에 보고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04)는 주거, 노동,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분석하며, 각각의 빈곤화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시연구소(2006)는 빈곤의 원인과 양상을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영역에서 분석하고, 빈곤계층별로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탈북자, 과중채무자, 저소득층 청소년 등으로 세분하여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미숙(2007)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최근 전통적인 빈곤 개념인 경제주의적 관점으로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사회현상과 여성빈곤 요인의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소득의 물질적 결핍의 차원을 넘어서 비물질적인 가족 내의 규범과 관습의 문제, 권력관계의 문제, 사회적 관계망과 시간, 여성들내의 계층적 차이

등을 고려한 빈곤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사이에서의 다차원적인 빈곤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성민(2009)은 사례연구를 통한 생애 내 빈곤화 과정의 추적, 다양한 메커니즘과 그 작동 시기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빈곤발생층위인 세계체제의 층위(세계적 차원의 분업 구조), 국가정책의 층위(계층간 소득분배구조와 사회구조), 개인 층위(개인의 지적 혹은 물질적 자산)를 받아들여, '세대 간 이행'이라는 층위를 추가하여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빈곤의 과정을 일반화하여 한국사회의 네 가지 빈곤화 메커니즘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1) 생애초기 한계상황, 2) 누적된 실패경험, 3) 가족으로 확산된 위험, 4) 중첩된 사회위기이다. 즉,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빈곤이 세대 간 이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초기의 가족 배경에서 잉태된 위험이 사회진입초기 개인이나 가족의 실패로 이어지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걸쳐 사업과 결혼 등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다시 위기를 경험한다. 여기에 IMF와 같은 사회위기가 중첩되면 다시 한 번 위기에 빠진다. 이러한 빈곤이행의 흐름은 빈곤화 위험이 층위간, 시공간, 세대간 누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빈곤 연구에서도 바로 이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 이성민과 이수철(2010)은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 적용의 차이, 빈곤의 측정단위와 연구단위,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지출, 각종 빈곤지수별 차이에 대검토를 통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연구의 장점, 빈곤의 누적적 흐름에 대한 고려, 그리고 극빈층의 세밀한 구분을 제안하면서,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단순히 한 시점이 아닌 생애사나 세대간으로 분석 시간을 늘리며, 빈곤선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극빈층 전략양상과 같은 빈곤층 내부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빈곤개념화를 통해서, 빈곤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 더욱 적실한 분석과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

최근 다차원적 빈곤측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에서 제시된 여러 접근방법들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소득 혹은 주거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다차원빈곤은 이들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빈곤부문에서 기존 연구와 달리 다차원적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통계자료로서 패널자료들의 활용이 가능한 200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혹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은 소득 또는 고용만을 다루고 있어 다차원 빈곤에서 요구되는 인구사회적 여건은 물론 경제·환경적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빈곤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소득빈곤과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빈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빈곤의 규모뿐 아니라 빈곤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김경혜, 2010). 분석접근방법에 따라, 크게 Sen의 실현능력접근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 연구(최균·서병수 2006; 서병수, 2007; 최균 외, 2011), Townsend의 상대적 박탈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승기, 2006; 이상일, 2008), 사회적 배제관점으로 측정된 연구(강신욱 외, 2005; 정미숙, 2007; 김교성·노혜진, 2008; 송미영, 2008; 문진영, 2010), 그리고 최근 서울시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김경혜(2011)등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균과 서병수(2006)는 빈곤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Sen의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어 서병수(2007)는 실현능력모델을 구축하여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균 외(2011)는 기본실현능력모델을 6개 차원으로 구축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였다. 동 논문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초기 연구를 발전시키고 차원계수 방식이라는 사용하여 차원 간에 빈곤에 준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각 차원에 대한 빈곤선 설정과 범주선택에 있어 자의성이 있었으며,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종단분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의진(2012)은 Sen의 실현능력접근에 입각하여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 그 구조 분석을 통해 빈곤의 다차원성과 노인 빈곤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경혜(2011)는 빈곤문제를 소득부족문제로 단순화 하는 기존의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 서울시거주자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소득결핍과 다른 생활영역의 결핍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득결핍이 다른 차원의 결핍여부를 모두 대표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은 18.4%인 반해서, 다차원적 결핍률 -교육, 건강, 주거, 고용분야-에서, 교육과 건강

은 30% 이상의 결핍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서울시민의 52.9%가 2개 이상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3가지 이상 다차원적 결핍가구는 25.1%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소득 관점에서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차원 빈곤에 있어 분석영역에 대한 차원의 설정은 본 연구의 중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김경혜(2011)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설정된 분야를 기초로 차원을 설정하고 있지만, 최균 외(2011)의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화폐적 영역과 비화폐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여섯 개 차원을 설정하고 있다. 차원설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문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두 번째로 연구자들이 스스로 차원을 설정할 경우 자의적 선정이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경제위기하에서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바 있다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본 연구의 차원을 설정하고자 한다(변재관·강혜규, 1999). 즉 변재관과 강혜규의 연구에서는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의식주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노동 및 건강 부문을 기초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sup>. 동 차원은 이미 최균 외(2011)의 연구와 김경혜(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차원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차원을 설정한 김경혜의 논문과는 교육부문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차원이 무리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선행 논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가구나 개인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변인의 특성을 고려한 빈곤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농어촌지역 빈곤문제를 다룬 연구나 논문들은 많지 않으며, 있어도 대부분은 소득 또는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농어촌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문제와 양극화문제를 다룬 연구로 박대식과 마상진(2012)의 연구를 들 수 있지만 동 연구는 설문을 통한 의식조사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

---

<sup>1)</sup> 본 연구가 도농간의 빈곤격차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2009년 정부가 농어촌에 처음으로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박대식 외, 2009), 동 기준은 농어촌에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있어 도시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아닌 변재관 외(2008)에서 제시한 국민복지기본선에서 설정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 빈곤문제를 의식만의 측면이 아닌 실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원인에 대한 지적이 올바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치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간 차이를 5개 빈곤차원별 또는 빈곤차원 간의 관계 이해를 통해 그 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저학력, 여성, 고령자일수록 빈곤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점을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도·농간 5개 빈곤차원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도·농간 5개 빈곤차원의 시계열별 빈곤상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차이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농간 빈곤격차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빈곤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내에 농어촌지역의 빈곤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밝히고, 빈곤정책에 있어 농어촌 빈곤정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다차원 빈곤차원 설정 및 연구방법

#### 1. 다차원적 빈곤 차원 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다차원적 빈곤측정을 위한 분석 차원은 선행연구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문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도농간에 빈곤격차가 발생하는 그 원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와 좋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소득감소, 도시에 비해 주거시설의 노후화, 도시 핵가족화 및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조손가족의 증가 등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박대식·마상진, 2012; 김태완 외, 2012). 변재관과 강혜규(1999)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민복지기본선을 설정하며 그 영역을 소득, 고용, 주거, 건강의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동 영역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부문이다. 이외에도 최근 국민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가족 간의 관계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주요한 부문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네 영역이외에 가족·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가족·사회적 문제의 영역을 추가하여 총 5가지 차원의

7가지 지표를 활용해 다차원적 빈곤선을 설정하고자 한다. 각 차원에서 설정한 빈곤선은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빈곤선과, 분석자료(한국복지패널)의 가득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차원설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 가. 소득차원

소득차원의 빈곤선으로는 빈곤연구에서 연구자들과 국제기구(OECD)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선으로 활용하고자 한다<sup>2)</sup>. 먼저 빈곤선 설정에 사용되는 소득은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기본으로 하며, 소득은 가구단위로 조사되어 있어 이를 균등화지수를 활용하여 가구원수별 차이에 의한 욕구를 동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균등화지수는 OECD 균등화지수로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하였다(여유진·김태완, 2006).

소득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재산 또는 자산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문제로 인해 하우스 푸어(house poor), 주거비 마련을 위한 과도한 지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문제에서 소득과 더불어 자산이 주는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차원에 적용되는 빈곤선으로써 소득빈곤과 더불어 자산빈곤을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자산빈곤선 설정을 위해 먼저 분석대상 자산은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을 기준으로 하였다. 빈곤선으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6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진 사람들을 가구빈곤으로 보았다<sup>3)</sup>. 동 방식은 이미 선행연구(남상호, 2009; 임병인, 2011)에서 활용되어 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 현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하면서 기존 선정기준에 사용되어오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다. 즉 차상위 계층의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조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여기서는 선제적으로 중위소득의 개념을 활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고자 한다(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3) 자산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절대적 자산기준은 남상호(2009)의 연구가 있으며, 상대적 자산기준은 여러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다(임병인, 2011). 2000년대 자산에 대한 버블이 형성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 기준 적용 시 자산빈곤이 과대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자산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 나. 고용차원

고용차원에서의 빈곤선은 근로빈곤층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여러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분석자료의 한계와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된 바를 기초로 하여 이병희, 반정호(2009)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빈곤층의 정의를 토대로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the workable poor)’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정의는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근로능력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정책적 목적과도 부합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가구의 빈곤 여부와 개인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개인 단위로 정의된다. ‘근로능력자가 1인 이상 있는 가구’처럼 가구단위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판별하는 데 용이하다.

개인의 근로능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연령, 근로능력에 관한 주관적 응답, 장애 등급, 주된 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이용하였다. 즉, 15세 미만의 아동,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 재학 중, 군복무 중, 중증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가사·육아에 종사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근로능력자에 포함되는데,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들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채택하여 가구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하였고, 가구 규모에 따른 육구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구 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을 측정하였다.

## 다. 주거차원

주거차원에서의 빈곤선은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농어촌의 주거문제는 도시에 비해 노후화된 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창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읍면부의 경우 1979년 이전의 주택이 39.7%이지만 동부는 6.6%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어촌 주거문제를 파악시 이와 같은 노후화정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차선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1997년에 서울시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한 바가 있으며, 이후 2000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고시로 발표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요소로 되어 있었다. 면적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부엌, 화장실·현관·수납공간 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2㎡, 2인가구는 20㎡, 3인 가구는 29㎡, 4인가구는 37㎡, 5인가구는 41㎡, 6인가구는 49㎡이었다. 최저주거기준이 정부안을 발표된 이후 최저주거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과밀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1년 5월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한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주거기준을 개편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면적기준의 변경 속에서 1인가구는 12㎡에서 14㎡로 개선되었고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제일 많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최저주거빈곤선의 설정에 있어서는 아래 정부가 발표한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족에 속한 개인들을 주거차원에서 빈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방구성	총 주거 면적	
			2011년 이전	2011년 이후
1	1인 가구	1K	12㎡	14㎡
2	부부	1DK	20㎡	26㎡
3	부부+자녀1	2DK	29㎡	36㎡
4	부부+자녀2	3DK	37㎡	43㎡
5	부부+자녀3	3DK	41㎡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	55㎡

주: 1)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자료: 건설교통부, 공고 2004-173호. 국토해양부, 공고 2011-490호.

## 라. 건강차원

세계보건기구(WHO)의 현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의 정의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신체 & 정신적 건강상태만을 규정

하였고 사회적 건강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차원(사회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의 정의의 특성상,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의 상태를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다차원적 빈곤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건강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있지만, 연구의 한계점에 건강 기준의 애매성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서병수,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이라는 차원의 빈곤선을 설정함에 있어 빈자와 비빈자의 건강빈곤의 차이를 의료 빈곤과 연결 지어서 정의하였다. 결국 건강빈자를 의료비 지출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 것이다.

신현웅 외(2010)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료안전망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의료빈곤의 문제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자격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의료급여에 포함되어야하나 포함되지 못하여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함으로써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는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로, 보장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여 의료이용이 필요하지만 의료를 포기하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실업 휴·폐업 등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어렵고 또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이 부담스러워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빈곤선의 설정은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추정하고자 한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건강보험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과, 두 번째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자로 추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자는 과부담의료비 지출지표를 통해 측정되며, 과부담의료비 지출지표는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을 분자로 하고 소득 또는 기초생계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분모로 한다. 연구자마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과부담으로 보는지는 5~50%까지 다양하며 이는 각국의 보건의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Xu 외(2003)의 기준에 따라 가구 총 소비지출에서 기초생계지출(식품 의료비)을 일괄적으로 제외한 금액을 지불능력으로 보고 이 중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경우로 보았다.

## 마. 가족사회적 차원

가족·사회적 차원의 다차원적 빈곤선의 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을 설정하였다. 최근에 한부모가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그 원인으로 사별은 감소하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과 미혼모가정 등의 출현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 가족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한 빈곤화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내 여성 불평등과 저임금체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안전망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회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송다영, 2006). 정미숙(2007)은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의 사회적 배제관점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관점에서 젠더의 이슈로서 접근하였다. 빈곤의 여성화현상을 소득이라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여성들의 자원형성과 통제에 영향을 주는 규범과 관습의 문제, 사회적 관계망과 시간, 가족 내의 권력관계와 여성들 내의 계층적 차이 등과 같은 비물질적 차원에 대한 여성빈곤의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김진웅과 고은주(2012)는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및 2010년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활용한 '빈곤의 성(性)분화' 연구결과에서, 지난 10년간 전체적인 빈곤율이 상승하였으며, 빈곤의 여성화 현상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특히 빈곤가구의 여성가구의 비율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속도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전반적인 빈곤율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반적인 빈곤율의 증가가 매우 성 편향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김은정과 이재인(2006)은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궁핍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역할의 혼란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에 노출된 집단으로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근거로 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요구되는 가족체제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면, 2007년에 와서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가족지원법으로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입법 대체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보면, 전통적인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아동과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며, 한부모가족은 '사별, 별거, 가출, 유기,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부모 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정책대상은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족, 청소년기 한부모가족(과거의 미혼부모 가족)까지 확장하게 된다(이혜경, 2011, p. 64-65).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책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범위에 조손가족까지를 포함시켜, 기존의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의 2세대 가족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 없이, 경제적 도움 없이 조모, 조부가 손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적인 조손 가족의 빈곤의 실태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양육자로서의 '가족'을 강조하는 정책적 경향을 나타낸다(이혜경, 2011).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으로 청소년한부모가족(미혼모 가족)을 포함시켜, 24세 이하 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 한부모가족들은 양부모가족보다 경제적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이후 2008년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에서도, 한부모가족 중 여성가구의 빈곤이 남성가구의 부자가족보다 빈곤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고은주·김진옥 2009; 강지원, 2009), 특히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20.7%)은 남성 한부모가족 빈곤율(13.77%)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이정아, 2009; 이혜경, 2011), 김진옥(2010)도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빈곤이 심각함을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제5조)에는 제4조에 명시된 자 이외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시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과 이들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나 조모로 이루어진 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보호대상자로 정해 놓고 있다(김안나 외, 2010). 이와 같이 사회구조 안에서 사회적 배제로 인한 다차원적 빈곤의 대상이 여성만이 아니라 더욱 그 대상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강지원(2009)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한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분석에서, 한국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나, 가족정책은 여전히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2. 다차원적 빈곤측정의 기준 및 빈곤선

구분	기준변수명	빈곤선
소득차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자산기준	최저생계비 6개월 미만
고용차원	근로빈곤기준	근로능력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주거차원	최저주거기준	정부발표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건강차원	자격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자
	의료비기준	과도한 의료비 지출자(의료품을 제외한 소비지출중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자)
가족·사회적 차원	가족관계	한부모가족(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족·미혼모포함)

## 2. 연구방법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차원적인 빈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각 차원에 대한 빈곤선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도·농간에 최소한의 표본을 확보해야만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동 자료를 통해 선행연구(최균 외, 2011; 김경혜, 2011)들이 다차원적 빈곤을 분석한 바 있으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한 바가 있다. 최균 외(2011)의 연구에서는 2005~2007년을 분석하고 있으며, 차원계수방식을 통해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자료이지만 2005~2011년간의 시계열 변화와 도농간의 차이, 다차원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패널 조사의 경우 전국에 대한 대표성과 많은 표본(아래 표 참조)을 통해 조사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일반사항, 소득 및 지출, 사회보험, 근로, 주거 및 재산과 기타 욕구대상자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근로활동, 소득 및 주거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sup>4)</sup>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농어업인구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는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표 3. 한국복지패널내 도·농거주 개인표본규모최저주거기준

구 분	전체	도시	농어촌
2005	18,856	17,508	1,348
2006	17,478	16,128	1,350
2007	16,613	15,332	1,281
2008	16,255	14,991	1,264
2009	15,625	14,359	1,266
2010	14,696	13,483	1,2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 IV. 분석결과

### 1. 기초분석을 통한 도·농간 비교

차원별 빈곤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소득차원의 빈곤율은 2005년 16.4%에서 감소하여 2011년 13.2%까지 3.2%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순자산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2005년 11.8%에서 2011년 9.0%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에서 보듯이 다른 차원이 빈곤수준에 비해서 소득차원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면 기존 연구들과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에 있어 소득이 주는 영향이 다른 차원의 빈곤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차원별 연도별 빈곤 변화

구 분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득(중위소득)	16.4	15.3	14.8	14.3	13.3	13.1	13.2
소득(순자산)	11.8	11.6	10.5	10.5	9.1	8.9	9.0
고용	8.1	7.7	7.4	7.0	6.5	6.3	6.3
주거	3.7	3.5	3.1	2.7	2.3	1.7	3.5
건강	9.2	5.41	5.7	5.6	3.8	3.3	2.6
가족	2.1	2.0	2.1	1.8	1.8	1.7	1.7

주: 1) 2006년의 경우 세부적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수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고용차원의 빈곤율은 2005년 8.1%에서 감소하여 2010년과 2011년 동일하게 6.3%까 1.8%포인트가 줄어들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차원의 빈곤은 소득(중위소득·순자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곤율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일을 해도 빈곤하다는 점에서 생활에 있어 고용이 주는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차원에서의 빈곤은 2005년에 3.7%이며, 2006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1.7%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이 확대되면서(표 2) 주거빈곤율이 3.5%로 증가하였다. 건강차원의 빈곤율은 2005년 9.2%에서 감소하여 2011년 2.6%까지 6.6% 감소하였다. 연도에 따른 빈곤율 감소정도는 건강차원이 다른 차원에 비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차원의 빈곤율은 2005년 2.1%에서 2011년 1.7%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지역별 차원별 연도별 빈곤 변화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31.2	29.9	28.0	25.1	23.0	23.7	25.9
	소득(순자산)	13.9	13.3	13.7	14.6	10.4	10.1	9.4
	고용	17.0	16.7	15.6	13.6	11.3	12.5	13.0
	주거	2.7	2.4	2.1	1.7	1.4	0.8	1.7
	건강	8.3	4.21	5.3	7.2	5.4	3.5	3.7
	가족	1.7	1.7	2.2	1.6	1.2	1.1	1.4
도시	소득(중위소득)	15.3	14.1	13.7	13.4	12.4	12.2	12.1
	소득(순자산)	11.6	11.4	10.2	10.2	8.9	8.8	8.9
	고용	7.4	6.9	6.7	6.4	6.0	5.7	5.7
	주거	3.8	3.6	3.2	2.8	2.3	1.8	3.7
	건강	9.3	5.51	5.8	5.4	3.7	3.3	2.5
	가족	2.1	2.1	2.1	1.8	1.9	1.7	1.8

주: 1) 2006년은 세부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동 수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다차원적 빈곤을 본 연구에 주제인 도·농간으로 구분하여 차원별 빈곤수준을 살펴 보면, 먼저 소득차원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소득차원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도·

농간 격차를 보면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소득빈곤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순자산을 통한 분석에서는 중위소득에 의한 차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빈곤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차원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빈곤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고용(근로)빈곤율 변화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줄어던 근로빈곤율이 2010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의 경우에는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차원에서 보면 농촌보다 도시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는 주거빈곤을 면적기준으로 분석하면서 농촌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면적이 작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빈곤율이 계속 줄어들다가 2011년에 최저주거기준 개선으로 인해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주거빈곤율은 2010년의 1.8%에서 2011년 3.7%로 농어촌지역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건강차원은, 도시의 빈곤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농어촌의 빈곤율보다 높았으나 2008년을 기준으로 역전되어 농어촌의 빈곤율이 도시보다 높아졌다. 농어촌의 건강빈곤율은 2005년 8.3%에서 2011년에는 3.7%로 빈곤율이 4.6% 포인트 감소하였고, 도시의 경우, 2005년 9.3%에서 2011년 2.5%로 6.8%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농어촌의 빈곤율이 도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차원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도시와 농촌 모두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2011년에 도시는 0.1%, 농어촌은 0.3%의 빈곤율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어촌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상승은 소득차원에서 농어촌의 중위소득에서의 빈곤율의 상승(2010년 23.7%에서 2011년 25.9%)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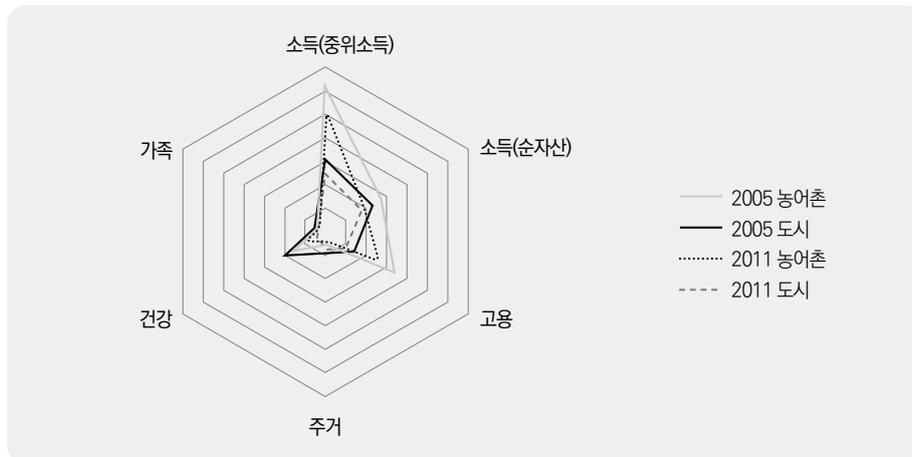
표5를 기초로 2005년과 2011년의 차원별 빈곤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1년 모든 차원에서 빈곤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가지 차원의 도농간 비교를 통해 보면 가족차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원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sup>5)</sup> 도시와 달리 농어촌의 경우 주거부문에서는 주택의 노후화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빈곤에 사용되는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ent index ratio, RIR)과 최저주거기준은 도시지역의 주거현황을 고려시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이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농어촌의 주거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재의 패널자료로는 이를 분석할 수 없어 주거부문에서 빈곤문제는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하는 것은 소득 차원으로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은 도시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의 고용문제와도 관련된다 할 수 있다. 고용불안정은 안정적 소득을 얻는데 불리하다는 점과 농어업 종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농어촌 거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차원별 분석을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의 소득현황을 개선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부의 고용정책이 제조업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에 특화된 고용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건강 및 가족생활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차원별 빈곤 변화(2005년과 2011년)

(단위: %)



다차원 빈곤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사회적 차원과 건강차원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각 차원별 빈곤지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각 차원별 영향에 있어서는 소득차원과 고용차원으로 0.664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순자산과 주거차원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상의 지위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는 주로 자산의 주요한 구성내용이라는 점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6. 다차원 빈곤지수간 상관관계 변화

구 분	소득(중위소득)	소득(순자산)	고용	주거	건강	가족
소득(중위소득)	1.0000	0.2239***	0.6644***	0.0413***	0.1313***	0.0937***
소득(순자산)		1.0000	0.1336***	0.2016***	0.1168***	0.1399***
고용			1.0000	0.0317***	0.0618***	0.0403***
주거				1.0000	0.0316***	0.0405***
건강					1.0000	0.0153
가족						1.0000

주: 1) \*\*\* : p<0.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다음으로 분석년도별 빈곤층이 몇 개차원에서 빈곤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도·농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여러 차원의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의 규모와 더불어 빈곤에 대한 심도(depth) 역시 중요한 빈곤의 평가방안이라 할 때,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차원별 빈곤경험자가 많다는 점은 농촌의 빈곤심도가 깊고 빈곤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빈곤수준은 감소하고 있지만, 3개 차원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빈곤층의 규모가 농어촌은 2011년 기준 4%내외인 반면 도시는 2.5%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빈곤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개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도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농어촌의 빈곤층이 2배 정도 높게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위와 같이 농어촌의

표 7. 지역별 차원별 연도별 빈곤 변화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어촌	1개차원 빈곤	17.4	16.6	14.0	16.9	14.8	14.4	13.3
	2개차원 빈곤	18.8	18.4	17.6	16.7	13.4	14.2	14.7
	3개차원 이상 빈곤	6.3	4.7	5.5	4.3	3.5	2.9	3.9
도시	1개차원 빈곤	14.4	14.4	13.1	13.7	12.4	11.6	11.6
	2개차원 빈곤	10.1	9.1	8.7	8.0	7.1	7.1	7.5
	3개차원 이상 빈곤	4.5	3.4	3.4	3.1	2.7	2.5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나 개인들이 많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지원보다는 다차원적이고 차원간 연계를 지닌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

다차원적 빈곤을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개별특성은 성별, 연령 및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 기준에 의한 도·농간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계층이 많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가. 성별에 따른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의 차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소득빈곤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도 농촌지역이 더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농어촌 여성의 소득빈곤은 30.0%로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같은 농어촌 남성에 비해서는 약 8% 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역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중위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율에 비해서는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남녀간 소득빈곤율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늘어나는 농어촌의 독거노인과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녀간 차이를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김태완 외, 2012). 고용차원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다소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비교 시 농촌지역이 2배 이상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남성과 여성의 경우 고용빈곤율의 차이가 크지는 않고 해마다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다. 소득과 고용은 상관관계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고용이 선행된다면 농촌에서의 소득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관률(2012)에 의하면 농촌에서의 일자리 양은 도시에 비해 적지 않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농촌의 일자리는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의 형태가 많으며, 특히 여성의 28.2%가 무급가족종사자였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및 소득 안정성을 낮추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형태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성별 지역별 차원별 연도별 빈곤 변화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성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27.4	26.5	25.4	20.9	18.8	18.8	21.9
		소득(순자산)	12.8	12.3	13.0	13.7	9.7	9.9	7.7
		고용	15.7	15.5	14.9	12.7	10.2	10.7	12.1
		주거	2.5	2.3	2.0	1.3	1.4	0.6	1.9
		건강	8.6	4.21	4.9	6.5	5.0	3.2	3.1
		가족	1.7	2.0	2.0	1.5	1.0	0.8	1.0
	도시	소득(중위소득)	14.0	13.1	12.5	12.4	11.4	11.0	11.1
		소득(순자산)	11.0	10.6	9.4	9.4	8.2	8.2	8.1
		고용	6.8	6.5	6.3	6.1	5.7	5.3	5.6
		주거	4.0	3.9	3.3	2.8	2.4	1.8	3.7
		건강	9.4	5.51	5.8	5.4	3.5	3.1	2.3
		가족	1.7	1.7	1.8	1.5	1.7	1.6	1.6
여성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34.6	33.3	30.4	29.1	27.1	28.7	30.0
		소득(순자산)	14.9	14.3	14.4	15.5	11.1	10.3	11.2
		고용	18.1	17.9	16.3	14.4	12.2	14.3	14.0
		주거	2.8	2.6	2.1	2.1	1.4	1.0	1.4
		건강	8.0	4.21	5.7	7.9	5.8	3.9	4.3
		가족	1.7	1.5	2.3	1.7	1.5	1.4	1.8
	도시	소득(중위소득)	16.5	15.1	14.8	14.4	13.4	13.4	13.1
		소득(순자산)	12.1	12.2	11.1	10.9	9.7	9.5	9.8
		고용	8.0	7.3	7.2	6.8	6.3	6.2	5.8
		주거	3.6	3.4	3.1	2.8	2.3	1.8	3.6
		건강	9.3	5.51	5.8	5.5	3.8	3.5	2.7
		가족	2.4	2.5	2.5	2.1	2.0	1.8	2.0

주: 1) 2006년은 세부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동 수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성별, 지역별 주거빈곤 차원에서는 2011년의 기준으로 도시지역 남성과 여성의 빈곤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지역 남성은 1.9%로 여성의 1.4%에 비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시 여성과 남성의 주거빈곤율은 농촌 남성과 여성의 주거빈

곤울에 비해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거차원은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인해 다소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의 주거빈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차원에서는, 남녀사이에 건강빈곤율이 소득차원처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인 빈곤율 차이 역시 2008년을 기준으로 농어촌의 빈곤율이 도시보다 높았다. 건강차원의 빈곤수준은 소득 및 고용차원과 비교시 높지 않게 나타나지만 연령별 분석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즉 청장년층에 비해서는 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차원의 빈곤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차원의 성별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와 농어촌 모두 여성의 2011년 빈곤율(도시 2.0%, 농어촌 1.8%)이 남성(도시 1.6%, 농어촌 1.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배제 관점의 정미숙(2007)의 연구에서의 지적과도 같이, 빈곤의 여성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여성의 빈곤과 젠더의 상관관계성에 대한 보다 사회맥락적,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빈곤율을 비교하면, 농어촌보다 도시의 빈곤율이 남성과 여성에서, 2011년의 경우, 남성(도시 1.6%, 농어촌 1.0%), 여성(도시 2.0%, 농어촌 1.8%)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경혜(2011)의 지적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측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복지결핍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본다. 또한 오히려 농어촌에 비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빈곤차원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지원의 결과로 인하여 오히려 도시의 빈곤층이 제외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연령에 따른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의 차이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차원은 중위소득이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경우 모두 청장년층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중위소득 빈곤율은 매우 높아서 도시지역은 40%초반, 농어촌지역은 5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어 노인들에 대한 소득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6)</sup>. 이와 같은

<sup>6)</sup> OECD 자료에 의한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상대적 빈곤율)으로 45.1%로 OECD국가 평균인 13.5%에 비해 세배 이상 높았다. 동 수치는 결국 조사된 3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오미애, 2013).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보다 크게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수준의 조정은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 범위,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소득빈곤에서는 청년층이 낮았으며 역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은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차원의 근로빈곤율은 청장년층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근로빈곤율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어촌에서 3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도시 노인에 비해 농어촌 노인들이 일을 해도 빈곤해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가 농촌지역에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도시에 비해서는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0~49세는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2배 정도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50~64세의 경우도 65세 이상 보다는 적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빈곤율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차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29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으로, 도시 4.0%, 농어촌 3.0%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의 0.5%에서 2.8%범위의 빈곤율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7년에 와서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입법 대체되면서, 전통적 모자가족과 부자가족뿐 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아동과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어, 소년소녀가장 가구와 청소년기 한부모가족(과거의 미혼모 가족)까지 확장하게 됨으로써 29세 이하 연령대의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도시 주거빈곤 중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빈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차원과 비교해 주거차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연령이 낮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연령에 비해 청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이후 바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년 또는 고령층에 비해서는 주거빈곤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7)</sup>. 건강차원의 경우 성별분석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7) 유럽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조기에 독립시 빈곤화 가능성을 높여, 가능한 부모로부터 독립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Iacovou, 2009). 특히 조기빈곤 요인으로 실업과 주거마련의 어려움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확연히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8을 기준으로 농어촌 빈곤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이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로, 이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낮은 소득과 연계될 경우에는 고령계층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게다가 농어촌의 경우 독거노인들이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농어촌 고령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sup>8)</sup>.

표 9. 연령별 지역별 차원별 연도별 빈곤 변화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9세 이하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15.0	14.8	14.5	11.4	10.3	9.6	13.4
		소득(순자산)	14.2	13.7	13.7	16.7	10.3	12.5	7.7
		고용	1.3	1.8	2.5	2.0	1.4	2.0	1.5
		주거	4.5	4.0	3.2	2.8	2.6	1.7	2.9
		건강	7.1	6.0	2.8	6.3	2.3	1.4	0.9
		가족	3.5	3.1	4.0	2.9	2.3	1.9	2.6
	도시	소득(중위소득)	10.3	9.9	9.2	9.0	7.6	7.4	7.3
		소득(순자산)	12.4	12.2	11.0	10.8	9.5	9.6	9.6
		고용	1.9	1.8	1.9	2.0	2.1	2.0	1.9
		주거	4.7	4.3	3.9	3.2	2.7	2.2	4.3
		건강	9.0	6.1	5.3	4.7	2.9	2.2	1.2
		가족	3.3	3.0	3.0	2.7	2.8	2.6	2.7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9세 이하 청년들은 소득과 더불어 주거에서도 빈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sup>8)</sup> 현 정부에서도 전달체계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보건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계대안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복지연계는 사업상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남양주와 양주시와 같은 좋은 사례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강혜규·최성은, 2010).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30~ 49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11.9	13.8	14.0	11.0	8.6	7.8	14.3
		소득(순자산)	11.8	10.7	12.6	14.6	9.5	7.6	8.7
		고용	10.4	12.3	12.7	9.7	7.1	6.7	12.7
		주거	3.4	2.5	1.6	1.7	1.2	0.3	1.1
		건강	7.0	6.5	3.7	5.2	2.5	1.7	0.9
		가족	1.3	1.9	1.4	1.2	0.8	0.3	0.6
	도시	소득(중위소득)	9.4	9.7	9.4	8.9	8.0	7.1	7.0
		소득(순자산)	11.2	10.8	9.5	9.5	8.0	7.0	7.1
		고용	8.6	8.8	8.4	7.8	7.0	6.2	6.2
		주거	3.7	3.8	3.1	2.8	2.2	1.6	3.7
		건강	9.1	6.2	5.4	4.9	3.1	2.4	1.4
		가족	1.8	1.8	1.7	1.6	1.7	1.4	1.4
50~ 64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36.7	34.4	27.0	22.7	23.5	24.5	20.2
		소득(순자산)	11.9	13.2	12.0	10.4	8.7	6.9	7.9
		고용	33.0	30.9	24.4	20.4	21.2	22.2	18.0
		주거	1.1	1.6	2.0	1.0	0.9	0.6	1.6
		건강	8.4	2.6	5.2	4.5	6.4	2.5	3.1
		가족	0.3	0.2	0.5	0.1	0.0	0.6	0.6
	도시	소득(중위소득)	20.9	18.4	16.5	15.6	14.5	14.4	14.4
		소득(순자산)	9.0	9.6	8.2	8.6	8.2	9.8	10.1
		고용	17.9	15.2	13.7	12.5	11.6	11.5	11.6
		주거	2.5	2.3	2.4	2.3	2.1	1.7	3.2
		건강	8.6	4.1	5.4	5.4	4.4	4.0	2.7
		가족	0.3	0.3	0.5	0.3	0.4	0.6	0.8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5세 이상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67.7	64.5	60.9	60.0	54.8	59.0	57.5
		소득(순자산)	17.3	15.5	16.3	15.3	12.9	12.4	13.6
		고용	31.7	30.0	28.5	27.3	20.4	24.0	22.9
		주거	0.8	1.0	0.9	0.7	0.5	0.3	0.8
		건강	11.0	0.5	10.2	12.6	11.8	9.3	10.5
		가족	0.9	1.0	1.8	1.5	1.3	1.1	1.3
	도시	소득(중위소득)	44.9	45.8	46.7	45.4	44.0	44.0	41.9
		소득(순자산)	13.8	13.3	13.4	12.5	11.1	10.7	10.6
		고용	9.1	9.6	9.7	9.2	8.8	8.1	7.0
		주거	2.4	2.1	2.1	1.9	1.7	1.3	2.1
		건강	12.1	2.1	10.3	10.8	7.7	9.5	10.1
		가족	1.0	1.5	2.8	1.3	1.3	1.4	1.4

주: 1) 2006년은 세부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동 수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 다. 학력에 따른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의 차이

다차원적 빈곤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중위소득 기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김태완 외, 2012)와 동일한 양상이며, 순자산을 통한 빈곤의 격차는 학력별, 지역별로 중위소득과 같이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다. 고용차원은 초졸 이하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빈곤율이 2배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졸, 고졸로 갈수록 차이가 점차 작아졌으며, 대학 이상의 경우는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 농어촌이라도 대학 이상인 경우 고용의 형태가 농업이나 비정규직이 아닌 도시와 같은 비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도시와 임금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학력별 지역별 차원별 연도별 빈곤 변화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초졸 이하 (무학 포함)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53.6	52.5	49.3	45.3	45.5	47.3	48.2
		소득(순자산)	15.7	16.1	16.1	14.4	12.6	11.7	12.6
		고용	28.6	29.7	26.3	22.9	20.9	22.5	21.0
		주거	2.1	2.0	1.6	1.3	0.9	0.6	1.6
		건강	10.2	1.9	8.6	9.7	9.6	6.7	7.8
		가족	1.6	1.9	2.5	1.7	1.4	1.2	1.2
	도시	소득(중위소득)	30.1	30.2	29.4	28.0	27.2	28.3	27.9
		소득(순자산)	15.6	15.5	14.3	14.3	12.0	11.6	12.3
		고용	10.9	10.7	9.8	8.6	8.5	8.5	8.3
		주거	4.4	4.3	4.1	3.1	2.9	1.9	3.6
		건강	11.4	5.9	8.2	8.0	5.5	5.1	5.3
		가족	3.1	3.1	4.2	3.3	3.2	3.0	2.7
중졸 이하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21.0	22.6	23.1	23.3	19.6	24.9	24.7
		소득(순자산)	13.8	12.5	13.7	15.1	11.4	9.5	11.7
		고용	11.9	14.5	13.3	15.4	11.4	15.7	15.3
		주거	2.8	2.9	3.1	1.6	3.0	1.5	1.8
		건강	7.8	6.6	5.2	7.3	7.1	3.0	4.4
		가족	2.5	1.3	3.7	4.0	2.5	1.7	1.5
	도시	소득(중위소득)	18.8	19.4	17.9	19.1	17.5	18.7	18.5
		소득(순자산)	14.0	13.7	11.0	13.3	11.8	12.5	12.1
		고용	9.3	9.8	9.2	8.7	8.1	8.4	8.5
		주거	4.3	3.9	3.9	4.3	3.4	2.9	5.3
		건강	10.6	7.2	6.0	7.3	5.9	4.9	4.0
		가족	3.3	3.9	3.3	3.2	3.5	4.7	4.2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졸 이하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15.4	15.6	11.7	11.6	9.9	12.2	15.8
		소득(순자산)	14.0	12.7	11.7	14.9	11.0	8.4	8.1
		고용	10.4	9.2	8.6	8.0	5.5	8.2	11.1
		주거	3.6	3.2	2.4	1.7	0.9	0.9	0.9
		건강	9.1	6.0	3.0	3.8	2.6	2.0	1.8
		가족	1.1	1.7	1.4	0.9	1.0	1.0	2.1
	도시	소득(중위소득)	12.1	11.4	11.9	11.9	11.3	10.6	10.4
		소득(순자산)	12.7	13.4	12.1	11.7	10.3	10.2	10.5
		고용	8.2	7.9	8.5	8.2	7.8	6.7	6.7
		주거	4.5	4.3	3.7	3.4	2.8	2.5	4.6
		건강	11.3	6.5	7.2	6.1	4.1	3.7	2.5
		가족	2.4	2.6	2.2	2.0	2.3	1.9	2.3
대학 이상	농어촌	소득(중위소득)	10.9	9.0	11.7	7.3	6.7	5.8	9.0
		소득(순자산)	6.7	9.6	11.2	12.1	5.4	9.5	6.1
		고용	6.6	5.8	8.2	5.3	4.8	3.6	5.3
		주거	2.2	2.1	1.6	1.9	1.4	0.7	2.2
		건강	3.1	5.2	1.4	8.2	1.4	0.9	0.3
		가족	1.0	1.4	0.9	0.5	0.5	0.5	0.9
	도시	소득(중위소득)	6.8	6.4	5.7	5.9	5.5	5.5	5.7
		소득(순자산)	6.3	6.3	6.1	5.9	5.7	6.0	6.2
		고용	5.1	4.5	4.0	4.2	4.0	4.0	4.1
		주거	1.8	2.1	1.8	1.7	1.4	1.1	2.7
		건강	5.3	3.8	3.5	3.3	2.0	2.1	1.1
		가족	0.4	0.3	0.3	0.4	0.4	0.4	0.5

주: 1) 2006년의 경우 세부적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수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하지만 여전히 도농간에 2009년 전산업 평균임금기준으로 농촌지역 임금이 도시임금의 56.4% (2004년 63.3%)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대졸 이상보다는 학력이 낮은 계층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저학력 근로자 또는 농업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관률, 2012).

주거차원에서 학력별로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다른 학력에 비해 대학 이상의 주거빈곤율이 2.2%로 높았으며, 고졸 이하가 주거빈곤율이 0.9%로 제일 낮았다. 도시지역에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보다는 초졸 이하의 빈곤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졸 이하를 제외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빈곤율이 낮았다. 이는 농촌지역과 달리 도시에서의 초졸 이하의 취약계층에 속하고 소득이 낮음에 따라 주거 수준 역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차원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확연하게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초졸 이하와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연도가 지날수록 빈곤율이 높아졌지만, 고졸 이하와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농어촌보다 도시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은 독거노인의 비중(통계청: 2010년 13.3%)이 도시지역(통계청: 2010년 4.5%)에 비해 높으며 이는 낮은 소득과 연계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라면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자료에서도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점에서 농어촌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sup>9)</sup>.

가족·사회차원의 경우, 한부모가족 중 도시의 중졸 이하 학력의 빈곤율이 2011년 4.2%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시의 대학 이상 학력의 빈곤율인 0.5%에 비해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이해경(2011)의 한부모가족 유형의 변화에서, 한부모가족 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2.3%, 2005년에는 36.6%로 감소한 반면,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9%에서 2005년

<sup>9)</sup>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부담을 주는 비용으로 주거비와 의료비를 들고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주거관련비용과 보건의료비 지출이 도시에 비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단위: %, 명)

특성	식비	교육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계(명)
전체	12.0	6.5	43.0	24.7	8.3	5.5	100.0(10,674)
동부	14.9	7.4	40.5	23.7	7.8	5.7	100.0(7,256)
읍·면부	6.0	4.5	48.3	26.8	9.5	5.0	100.0(3,416)
노인독거	9.6	0.6	56.4	25.5	4.8	3.1	100.0(2,094)
노인부부	10.7	0.3	42.8	29.7	11.3	5.0	100.0(5,171)
자녀동거	15.4	20.5	34.1	15.9	6.3	7.9	100.0(2,915)
기타	16.3	13.3	40.2	20.0	3.7	6.5	100.0(491)

자료: 정경희(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에는 29.1%로 급증하였다고 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현상인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기, 청소년기의 학력중단의 위기와 한부모가족 중 도시의 중졸 이하 학력의 빈곤율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혼할 경우,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실태로, 조손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가족 등 한부모가족 증가는 도시의 중졸이하 학력의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혼모가족 등 청소년기 한부모가족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등의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다차원적 빈곤의 동태적 변화

지금까지의 횡단면적 현황분석(단일연도 분석)에 이어, 패널자료 특성을 활용한 종단면적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sup>10)</sup>. 먼저 전체 차원에서 고용,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에 비해 소득차원인 중위소득과 순자산의 차원에서 빈곤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농간의 비교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차원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복빈곤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빈곤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일시적인 빈곤의 경우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주거빈곤에 있어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이 지속빈곤, 반복빈곤과 일시빈곤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차원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sup>11)</sup>.

10) 복지패널을 활용한 종단분석은 동 자료가 2005년부터 2011년의 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7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빈곤변화를 지속, 반복, 일시 및 비빈곤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빈곤변화의 특성은 7년의 분석기간 중 4개년도간 계속해 빈곤상태에 머무르면 지속빈곤, 7년 중 한 해만 빈곤을 경험한 경우 일시빈곤, 7년중 한 번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비빈곤, 앞의 세가지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복빈곤으로 정의하였다(OECD, 2008).

11) 연도별 분석과 같이 주거빈곤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농어촌에 비해 도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주거문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농어촌의 주거빈곤의 경우 면적과 더불어 주택노후화, 시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기준으로 1990년대 이전 지어진 주택은 도시는 30.0%, 농촌은 39.8%로 노후화정도는 농촌이 9.8%포인트 높았다(박윤호 외, 2010).

표 11. 다차원 빈곤의 동태적 변화

(단위 : %)

구 분		소득(중위소득)	소득(순자산)	고용	주거	건강	가족
농어촌	지속빈곤	23.3	14.5	6.8	0.4	0.3	1.1
	반복빈곤	23.9	15.5	15.2	2.3	5.8	0.6
	일시빈곤	10.8	9.5	9.5	1.7	14.7	0.9
	비 빈 곤	42.1	60.4	68.5	95.6	79.2	97.5
도시	지속빈곤	12.8	11.9	2.2	1.1	0.7	1.3
	반복빈곤	18.7	15.2	7.6	3.3	6.5	1.6
	일시빈곤	13.4	8.5	9.6	3.9	11.4	1.1
	비 빈 곤	55.1	64.4	80.6	91.7	81.3	9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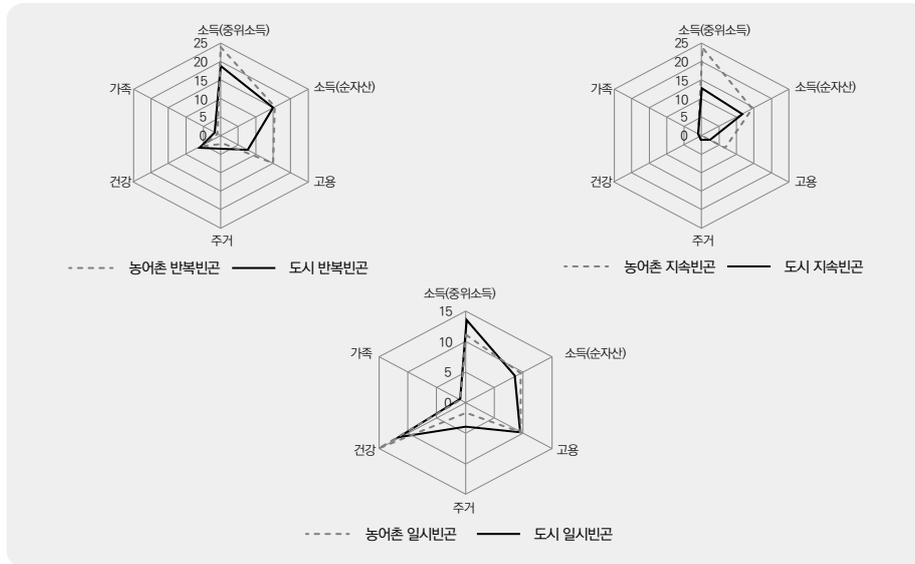
건강차원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에서는 일시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나머지 지속빈곤과 반복빈곤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 모두 다차원적 빈곤의 비빈곤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지속빈곤율은 다른 차원의 주거나 건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을 통해서 다차원적 빈곤의 종단적 특성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해 보면,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지속 및 반복빈곤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시빈곤에서는 도·농간에 격차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도시와 농어촌간에 각 차원별로 빈곤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빈곤정도(혹은 심도)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횡단면의 특성이 동태적인 특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지속·반복빈곤이 높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소득, 자산 및 고용차원에서의 빈곤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고 이는 탈빈곤을 위한 종합적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어촌의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빈곤지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농어촌의 빈곤문제해결은 도시와 같이 다양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업 경쟁력 강화, 기타 농어촌 기반하는 산업군을 계속적해서 개발·발굴해 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소득활동의 안정화를 통해 개인은 스스로의 주거, 건강 및 가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며 정부는 기타 정책을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림 2. 시간변화에 따른 차원별 빈곤 수준

(단위 : %)



다차원적 빈곤의 특성을 분석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성별분석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빈곤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경우 역시 반복적으로 소득차원의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가 높았다. 오히려 도시지역의 여성들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에 비해 지속 및 반복빈곤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차원에서 보면, 도시와 농어촌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반복적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반복빈곤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수준에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좋지 않으며, 여성들 간에도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좀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위소득차원에서와 같이 도시 여성의 반복빈곤율은 농어촌 남성의 반복빈곤율보다 더 낮았다. 현 정부에서 여성고용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농간 모두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용차원에서 근로빈곤율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문제(자녀양육, 남녀 간 임금 및 복지격차 등)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빈곤차원에서 도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반복적이고 지속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촌의 여성과 남성을 비교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빈곤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차원은 일반적으로 환경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여건이 좋고, 고령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농어촌의 건강빈곤수준은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적인 빈곤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송다영(2006)은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한 빈곤화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내 여성 불평등과 저임금체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안전망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또한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의 사회적 배제관점에서 젠더의 이슈로서 접근한 정미숙(2007)과 빈곤의 여성화현상의 심화를 지적한 김진웅과 고은주(201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다차원 빈곤의 동태적 변화(성별)

(단위 : %)

구 분		소득(중위소득)	소득(순자산)	고용	주거	건강	가족	
남성	농어촌	지속빈곤	19.5	14.8	5.9	0.3	0.5	0.9
		반복빈곤	24.5	16.2	13.0	2.0	5.4	0.5
		일시빈곤	12.3	9.0	9.2	1.6	14.2	0.8
		비 빈곤	43.8	60.0	71.9	96.1	80.0	97.8
	도시	지속빈곤	12.2	11.6	2.0	1.2	0.7	1.1
		반복빈곤	20.5	16.9	7.1	3.3	6.2	1.3
		일시빈곤	13.4	8.8	9.6	4.1	10.9	0.9
		비 빈곤	53.9	62.8	81.4	91.5	82.3	96.7
여성	농어촌	지속빈곤	27.2	14.2	7.8	0.5	0.2	1.3
		반복빈곤	23.2	14.9	17.5	2.6	6.2	0.6
		일시빈곤	9.3	10.1	9.7	1.9	15.1	0.9
		비 빈곤	40.4	60.9	65.0	95.1	78.5	97.1
	도시	지속빈곤	13.5	12.3	2.4	1.1	0.8	1.4
		반복빈곤	16.8	13.5	8.1	3.3	6.9	1.8
		일시빈곤	13.4	8.2	9.6	3.8	12.0	1.2
		비 빈곤	56.3	66.0	79.9	91.9	80.3	95.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다차원적 빈곤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역시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29세 이하 청년층도 노인계층 다음으로 높은 빈곤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노인계층 다음으로 위기세대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실업은 동 세대의 빈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도·농간에도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빈곤경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 번 빈곤하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빈곤에서는 29세 이하의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속 및 반복빈곤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기준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 청년층의 순자산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차원에서는 농어촌 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지속 및 반복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근로빈곤율이 지속, 반복 및 일시빈곤에서 늘어나고 있어, 연령과 근로빈곤은 동태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모두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주거빈곤수준의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반복적 빈곤비율을 보면 농촌 3.8%, 도시는 3.7%로 주거빈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분석에서와 같이 청년층의 독립이후 주거문제가 고용과 더불어 향후 중요하게 살펴볼 분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차원에서 가장 높은 지속빈곤을 보여주는 계층은 농어촌의 경우 50~64세이고 도시의 경우는 65세 이상에서였다. 일시빈곤의 경우,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빈곤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경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9세 이하와 30~49세의 연령에서는 도시의 빈곤이 높은 반면, 50~64세와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농어촌의 빈곤경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차원에서도 29세 이하 연령에서 지속적 빈곤율이 도시 2.0%, 농어촌 2.2%로 모두,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며, 젊은 청년

12) 청년층의 빈곤화 요인으로는 첫 번째, 청년들의 소득이 부모세대에 비해 낮으며, 취업을 해도 초기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부모세대에 비해서는 빈곤화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20대 초반에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우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소득에서, 주거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Iacovou, 2009).

표 13. 다차원 빈곤의 동태적 변화(연령별)

(단위 : %)

구 분		소득(중위소득)	소득(순자산)	고용	주거	건강	가족	
29세 이하	농어촌	지속빈곤	20.0	24.1	0.3	0.8	0.3	2.2
		반복빈곤	25.2	19.4	1.0	3.8	3.3	0.6
		일시빈곤	9.7	9.2	1.4	2.0	9.5	1.5
		비 빈 곤	45.2	47.3	97.2	93.4	87.0	95.7
	도시	지속빈곤	14.4	17.5	0.2	1.5	0.7	2.0
		반복빈곤	23.4	22.6	1.8	3.7	6.0	2.4
		일시빈곤	14.4	8.7	3.7	4.8	9.4	1.5
		비 빈 곤	47.8	51.2	94.4	90.1	84.0	94.2
30~4 9	농어촌	지속빈곤	9.8	11.5	3.5	0.1	0.1	0.3
		반복빈곤	20.4	15.5	14.6	2.0	3.1	0.6
		일시빈곤	11.6	11.6	12.1	2.3	9.8	1.0
		비 빈 곤	58.2	61.4	69.8	95.7	87.0	98.1
	도시	지속빈곤	6.6	8.3	1.7	0.9	0.8	1.1
		반복빈곤	13.5	11.9	8.8	3.3	5.4	1.0
		일시빈곤	12.8	8.3	12.5	3.9	9.1	0.5
		비 빈 곤	67.1	71.5	77.0	91.9	84.7	97.3
50~6 4	농어촌	지속빈곤	16.4	11.6	9.0	0.5	0.9	0.8
		반복빈곤	20.0	11.5	18.6	2.3	4.2	0.2
		일시빈곤	14.4	8.6	14.3	1.6	15.8	0.1
		비 빈 곤	49.2	68.3	58.2	95.5	79.2	98.9
	도시	지속빈곤	9.6	8.8	5.3	1.3	0.7	0.6
		반복빈곤	15.5	9.4	13.2	2.9	7.1	0.9
		일시빈곤	14.6	8.0	14.9	3.3	13.8	1.0
		비 빈 곤	60.3	73.8	66.6	92.5	78.5	97.5
65세 이상	농어촌	지속빈곤	46.8	8.5	16.2	0.1	0.2	1.0
		반복빈곤	29.1	14.4	30.2	0.7	12.8	0.8
		일시빈곤	8.2	8.6	12.3	1.0	24.8	0.6
		비 빈 곤	16.0	68.5	41.3	98.2	62.2	97.6
	도시	지속빈곤	33.7	9.6	5.2	0.4	1.0	0.6
		반복빈곤	24.3	10.2	14.5	2.5	11.0	1.7
		일시빈곤	9.9	9.2	11.9	2.1	22.5	1.4
		비 빈 곤	32.1	71.1	68.4	95.0	65.6	9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기 빈곤율의 상승은 그 사회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업, 미취업으로 인한 학업 및 결혼정년기의 연장 등 사회전반적인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력별 다차원적 빈곤의 종단적 특성을 보면, 중위소득 기준에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지속 및 반복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한 번 빈곤하면 탈빈곤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학력별 격차는 크지 않으며, 단지 지역별로만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차원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지속 및 반복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빈곤수준을 보면 농촌에서는 대학 이상 학력은 다른 농촌의 학력계층보다 지속 및 반복 빈곤을 경험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대학 이상도 지속적인 빈곤율이 다른 도시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촌의 대학 이상 빈곤율에 비해 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의 초졸, 중졸, 고졸계층이 농촌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탈빈곤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차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반복빈곤 및 일시빈곤의 경험율이 높았으며, 지속빈곤의 경우 초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학력에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지속빈곤 경험율이 높아졌다. 또한 대체로 농어촌보다 도시에서의 지속빈곤과 반복빈곤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사회차원에서는, 표10의 학력별 지역별 차원별 연도별 빈곤 변화와 마찬가지로, 중졸 이하 도시지역의 거주자가 2.8%의 지속빈곤을 나타내는 것으로 초졸 이하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비교에서도, 도시가 2.8%, 농어촌은 1.1%로 2배 이상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중졸 학력자 개인과 가족, 사회적 요인의 분석을 통한 빈곤의 원인과 과정, 그 작동 시기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4. 다차원 빈곤의 동태적 변화(학력별)

(단위: %)

구 분		소득(중위소득)	소득(순자산)	고용	주거	건강	가족	
초졸 이하 (무학 포함)	농어촌	지속빈곤	36.9	10.0	13.5	0.3	0.4	1.1
		반복빈곤	29.7	15.2	26.6	2.2	9.4	0.7
		일시빈곤	9.5	10.3	10.2	2.0	22.5	0.8
		비 빈 곤	23.9	64.6	49.6	95.5	67.7	97.4
	도시	지속빈곤	22.6	11.0	4.9	1.3	0.7	1.5
		반복빈곤	20.2	12.2	11.3	4.3	9.4	2.3
		일시빈곤	11.9	9.4	9.0	3.6	16.3	1.1
		비 빈 곤	45.3	67.4	74.8	90.9	73.6	95.1
중졸 이하	농어촌	지속빈곤	21.1	11.8	8.9	0.4	1.0	1.1
		반복빈곤	18.2	10.9	14.9	4.3	5.2	0.7
		일시빈곤	12.1	7.7	12.6	0.6	15.3	0.3
		비 빈 곤	48.6	69.7	63.7	94.7	78.5	97.9
	도시	지속빈곤	12.6	10.8	4.1	1.3	1.3	2.8
		반복빈곤	19.6	11.1	11.6	4.7	7.9	2.1
		일시빈곤	13.8	7.5	10.6	5.3	15.9	2.2
		비 빈 곤	54.1	70.7	73.7	88.7	75.0	93.0
고졸 이하	농어촌	지속빈곤	11.9	13.1	2.9	0.5	0.3	1.6
		반복빈곤	17.9	14.4	11.3	2.3	4.7	0.8
		일시빈곤	15.0	11.2	13.1	2.2	9.9	1.1
		비 빈 곤	55.1	61.3	72.7	95.0	85.1	96.5
	도시	지속빈곤	8.5	10.6	2.4	1.6	0.9	2.0
		반복빈곤	15.2	12.6	9.2	4.2	8.1	2.1
		일시빈곤	15.0	8.5	12.7	4.7	13.2	1.6
		비 빈 곤	61.3	68.3	75.7	89.6	77.8	94.3
대학 이상	농어촌	지속빈곤	10.5	15.5	1.9	0.5	0.1	0.6
		반복빈곤	23.6	16.7	6.4	1.7	3.1	0.2
		일시빈곤	8.2	5.9	5.3	1.3	11.1	1.2
		비 빈 곤	57.8	61.9	86.5	96.5	85.8	98.0
	도시	지속빈곤	6.2	8.2	0.7	0.9	0.7	0.5
		반복빈곤	15.9	14.2	5.2	2.2	4.6	1.0
		일시빈곤	13.0	7.5	9.2	3.3	8.1	0.6
		비 빈 곤	64.9	70.1	85.0	93.6	86.6	9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원자료.

## V.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도·농 간의 빈곤격차의 전반적 현황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석, 시계열 빈곤변화에 따른 동태적 추이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개편에 있어 농어촌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다차원적 빈곤차원에서 도·농 간에 빈곤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따라서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차원적 빈곤 분석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다른 차원들에 비해 소득, 자산 및 고용차원의 빈곤율이 다른 차원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빈곤상황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득, 자산 및 고용차원의 높은 빈곤수준은 횡단면 분석과 동태적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소득 및 고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빈곤특성별로 성, 연령 및 학력 차원에서 살펴보면 여성,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 고용 및 건강차원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시 횡단면 분석은 물론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빈곤문제가 제기되다는 점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각 차원별 분석에서 특징을 보면 소득차원에서는 청년층의 빈곤수준이 노인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연계되어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비록 농어촌의 청장년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양질의 자리가 부족하다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용차원에서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도시보다 다소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역시 청년실업과 같이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일자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거차원에서는 노인들에 비해 오히려 청년층의 주거빈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차원에서는 분석초기에는 도시지역의 빈곤수준이 높았지만 2008년 이후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건강차원 빈곤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차원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고령화가 도시에 비해 심한 농어촌

노인들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 또는 지원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차원의 빈곤에서는 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족해체 증가와 농어촌 가구에서 조손가족들이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다는 점, 다문화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농어촌사회의 가족 변화를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은 문제제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한미 FTA, 한칠레 FTA 향후 중국과의 FTA 등)으로 인해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농어업의 산업기반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충분한 산업기반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농어촌의 소득 및 일자리의 수준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문제, 청장년층의 도시지역 이동, 결혼 이민자 와 그 자녀들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화,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이 직면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계획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본 논문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농어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화 현상과 도농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 및 고용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다른 빈곤차원에 비해 소득 및 고용차원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낮은 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부족은 좋은 인력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 소득 확충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직불제도의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업소득의 증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29세 이하 연령층(청년기)의 높은 빈곤율은 세대 간 소득이전의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젊은 계층의 빈곤은 결국 노인세대로의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사회적 이슈로 다차원적 빈곤의 접근을 통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장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생활수당으로서 일정기간 농어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농어업 종사 및 농촌정착을 위한 기반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음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우선 확대하되 농어촌의 경우에는 70%와 같은 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노인들의 보건의료비 부담이 높고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도시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농어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면제하거나 연 5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족차원에서는 늘어나는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모이혼의 급증과 가족해체, 부모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소년·소년가장가족, 조손가정의 증가는 아동·청소년복지영역, 노인복지영역과 한부모가족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정개입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복지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과정 속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각 사업단에 차량과 그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 개념을 활용하여 도·농 간의 빈곤격차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농 간 빈곤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빈곤수준을 분석한 각 차원 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차원별 분석에서 주거부문에 대한 빈곤선의 설정은 자료상의 한계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화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거빈곤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족차원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 또한 농어촌의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각 차원간의 연계와 빈곤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더불어 정확한 빈곤선 설정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성호, 최옥금(2011).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 일반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34(1), pp.95-117.
- 강지원(2009).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29(2), pp.30-54.
- 강혜규, 최성은(2010). 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94-104.
- 고은주, 김진욱(2009). 한부모가족의 빈곤요인에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 219-236.
- 국가인권위원회(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 김경혜(2010). 다차원적 빈곤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경혜(2011).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SDI 정책 리포트*, 100(단일호), pp.1-21.
- 김교성, 노혜진(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34(단일호), pp.133-162.
-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 한정원, 김양미(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연구보고서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주(2008).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pp.31-53.
- 김은정, 이재인(2006).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사회복지정책*, 25(8), pp.253-278.
- 김진욱(2010). 한부모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pp.102-125.
- 김진웅, 고은주(2012). 한국 소득이전 빈곤감소 효과의 성분화: 2000-2010 빈곤의 여성화 추이연구. *사회복지정책*, 39(1), pp.23-53.
- 김태완, 김미곤, 김문길, 정희선(2012). 농어촌 빈곤실태와 정책개선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호(2009). 저소득층의 자산실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2010).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pp.87-107.

- 박경숙(2008).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한국사회학, 42(1), pp.96-129.
- 박대식, 마상진(2012).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20,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병현, 최선미(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5), pp.185-219.
- 박윤희, 구승모, 이한성(2010). 농촌 임대주택에 대한 요인별 입주의사 분석. 농업과학연구, 37(1), pp.151-160.
-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2005). 저소득능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변재관, 강혜규(1999).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95-120.
- 변재관, 강혜규, 이현주, 이윤경, 김성한, 심재호(2000). 공공·민간 지역복지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병수(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단일호), pp.199-232.
- 송다영(2006).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권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327-333.
- 송미영(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연구, 17, pp.49-72.
- 신현용, 심영석, 황도경, 윤필경(2010).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태완(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26(1), pp.95-134.
- 오미애(2013).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6, pp.25-35.
- 이관률(2012). 농촌일자리 문제의 현황과 쟁점, 농촌일자리 창출방안 워크숍.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희, 반정호(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향. 동향과 전망, pp.215-244.
- 이상일(2008). 상대적 박탈의 논리와 소득의 차원을 비교적으로 적용한 빈곤선의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pp.185-225.
- 이성민(2009). 빈곤화 메커니즘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923-933.

- 이성민, 이수철(2010).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9(2), pp.153-178.
- 이승기(2006). 소득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와 박탈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의 가구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 pp.37-54.
- 이은우(2007). 농촌빈곤의 결정요인과 빈곤층의 특성. *농촌경제* 2008, 30(4), pp.87-103.
- 이정아(2009). 여성가구주 가구의 항상 빈곤화: 추세와 요인, *여성연구*, 77(2), pp.49-79.
- 이창호(2012). 농어촌주택개량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460, 국회입법조사처.
- 이혜경(201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변천에 따른 수급대상자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1(1), pp.61-84.
- 임병인(2011). 자산빈곤, 김문길 외,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71-192.
- 정경희(2012). 노인의 가족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2, pp.6-16.
- 정미숙(2007).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이론-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7(1), pp.55-92.
- 정의진(2012).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균, 서병수(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 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측면과 측정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pp.333-362.
-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pp.85-111.
- 한국도시연구소(2006). *한국 사회의 신 빈곤*. 파주: 한올아카데미.
-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Alkire, S., Foster, J. (2011a).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 pp.476-487.
- Alkire, S., Foster, J. (2011b). Understandings and misunderstanding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9(2), pp.289-314.
- Alkire, S. (2002). *Valuing Freedom: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Poverty Re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tkinson, R., Davodi, S. (2009).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 Doyal, L., Gough, I. (1991). *A Theory of Human Need*, London: Macmillan.
- Finni, J(1980). *Natural Laws and Natural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Iacovou, M. (2009). Crossing-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with longitudinal data: research into youth poverty, *21st Century Society*, 4(2), pp.149-160.
-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Ravallion, M. (2011). On multidimensional indices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 Xu, K., Evans, D. B., Kawabata, K., Zeramdini, R., Klavus, J., Murray, C. J. (2003)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362(11), pp.1-7.

김혜자는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특수교육학(학습장애/정서장애)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 복지영역이며, 현재 '자폐성장애 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mindtheresa@gmail.com)

박지영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음악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사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와 정신보건 분야이며,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dasom-0117@hanmail.net)

고난난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사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부조, 의료보험과 정신건강 분야이며, 현재 청소년핸드폰중독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다.  
(E-mail: nannan86@live.com)

진나연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생명과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영역이다.  
(E-mail: beacon763@naver.com)

김정은은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에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및 서비스통합 전달체계이다.  
(E-mail: lydiasilver@gmail.com)

## **A Study of the Urban-Rural Poverty Gap by Applying Defin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o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5-2011**

**Kim, Heyei-Ja**

(University of Seoul)

**Park, Ji-Young**

(University of Seoul)

**Go, Nan-Nan**

(University of Seoul)

**Jin, Na-Yeon**

(University of Seoul)

**Kim, Jung-Eun**

(University of Seoul)

Existing studies on rural poverty, which have been emphasized on economic perspectives, are limited to be understood a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pplied poverty studies. To solve this study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e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s composed of five dimensions beyond economic measures, and then applied the multiple measures to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5-2011) for analyzing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from the cross se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large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females, the elderly, and the less-educated presented higher rates of poverty than other groups. In terms of living housing, the poverty rates showed a sharp increase in 2011, due to recent amendment of national housing law. In terms of health, the study found a reversal phenomenon in 2008, because the poverty rates of rural areas get started higher than the rates of urban areas, due to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diture to income ratio in rural areas. In term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the poverty rate of single-parent families showed higher in urban areas than rural areas.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dynamic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revealed that incidents of poverty were higher in income compared to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persistence of poverty was lower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in terms of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rural areas experienced more persistent and repeated incidents of poverty. In sum,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empirically supported even when this study extended dimensions of poverty measures beyond existing economic-approach.

---

**Keywords:** Multidimensional Poverty, Rural Poverty, Urban-Rural Poverty Gap